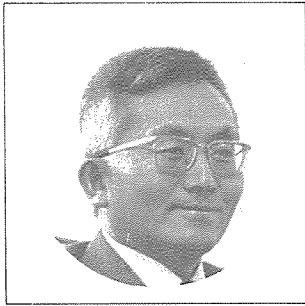


反科學技術운동의 예측과 대처방안

科學技術문화의 綜合연구 시급



朴 星 來

〈韓國外國語大교수 · 科學史〉

“마치 독립기념일의 불꽃 놀이를 몇배 크게 벌인 듯”한 그런 전쟁이 지구의 저쪽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 연속 상연되는 한편의 전쟁 영화라도 되는 듯, 또는 운동 경기를 구경하듯 사람들은 실제 전쟁을 구경꺼리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 전쟁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을 살상하게 될런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앞으로 위급할 경우 이 〈석유전쟁〉은 화학전 또는 핵전쟁으로 까지 확대될지도 모를 일이다. 기독교와 회교와의 대결로까지는 가지 않는다 해도...

가장 참혹한 전쟁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전쟁은 여러 모로 특이하다. 우선 시작이 예고된 상황에서 서로 준비를 할만큼 한 다음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전쟁이 일어났건만 처음 이를 동안 전세계의 주식 값은 폭등세를 보였다. 전세계가 오랜 미·소의 냉전시대를 마감하고 평화를 구하러는 듯한 환상에 빠지기 시작할 때 엉뚱한 아랍의 독재자 한 사람이 독무대에 올라가 세계 제패라도 노리는 듯 큰소리를 치는 것도 특이하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우리도 서방측의 일방적 보도와 서구적 가치관에 길들여져 사담 후세인을 최악의 독재자로 생각할 뿐이지 그는 자기 국민들로부터는 조금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부시 또한 ‘민주주의’의 후광을 업고, 침략당한 작은 나라 쿠웨이트의 독립을 되찾아

주겠다고 팔을 걷어 부쳤지만, 그를 그렇게 만든 가장 큰 힘은 다름 아닌 “아라비아灣에 있는 석유의 西方側 지배”를 확실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美國의 세계 주도권을 확립하겠다는 뜻이며, 그 뜻은 알고 모르는 사이에 미국인들의 합의를 얻고 있다.

이번 전쟁은 처음의 ‘페만전쟁’에서 ‘걸프전쟁’으로 용어를 바꿨지만, 내가 보기에는 다름아닌 석유쟁탈 싸움일 뿐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의 괴상한 전쟁이라고도 함축하다. 또 석유만 해도 그것이 과학기술의 발달 아니었다면, 별로 쓸모 없는 그 지역의 땀감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석유전쟁을 보면서, 그리고 그 전쟁의 소란한 틈에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무력 진압을 강행한 소련 소식을 신문구석에서 읽으면서, 오늘 세계의 知性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언젠가 이번 전쟁이 끝나고 그 참혹한 피해가 밝혀지기 시작하는 날 세계의 知識人들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석유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미래가 전쟁없는 사회로 가기는 커녕, 더 큰 전쟁에 말려들어 인류 전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또 인류가 지상에 존재하는 한 民族

과 民族, 國家와 國家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그 中心軸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과학기술이란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비록 첫날의 戰果를 과대 평가한 실수는 있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이 전쟁에 이길 것은 분명한 일이다. 우리 눈을 현란하게 해주고 있는 바로 그 첨단기술을 미국측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의 성공으로 아라비아灣 일대의 석유배분의 권력을 강화한다해서 미국이 세계에 남기게 될 모습이 그렇게 좋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의 지식층 사이에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장 잘 활용되는 분야가 다름 아닌 美國의 대외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武力을 갖추는데 있었음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또 그리고 많은 세계인들은 그들이 어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을 전자오락처럼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 반성하는 자세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석유전쟁>의 가장 중요한 후유증의 하나는 틀림없이 전세계적인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또 하나의 반과학기술운동의 바탕을 마련하게 될 것이기도 하다. 나에게 주어진 “反科學技術運動의 豫測과 對處방안”이란 제목에도 이미 나타나듯이 이미 우리나라에도 반과학기술 운동은 존재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 안면도 주민들의 ‘핵폐기물 처분장 시설’ 건설반대 운동을 그 대표적인 경우 하나로 보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경우를 예측해 보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로는 우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반과학기술 운동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강렬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앞에서 장황하게 예로 든 것처럼 현대의

과학기술은 이미 인간이 만들어 냈으면서도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 있다. 바로 이렇게 프랑켄슈타인화해 버린 과학기술에 대한 반발이 우리나라에도 더 널리 퍼져 가면서 반과학기술 운동을 가속화해 줄 것 같다.

둘째로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는 개혁운동의 물줄기에 과학기술이 한 가닥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판의식이 강한 학생층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서적들이 제법 읽히기 시작한지 이미 몇 년이 되었음을 상기해 볼 때, 그들의 독서 효과는 곧 그들의 운동으로도 가시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이미 TV공익광고를 통해서 더욱 실감있게 전달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심각한 공해, 환경오염의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반과학기술 운동의 좋은 토양이 될 것이다. 이미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反文化의 물결이 이 땅의 젊은이들 사이에 새로 번져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넷째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가 그동안 잔뜩 움추리고만 있던 과학자와 기술자 사이에서도 차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까지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의 국가적 발전에 기여하는 계층이었다기 보다는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은 수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또 그런 실정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자들을 “온실”속에 보호하면서 길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다양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과학기술자들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숫자도 팽창했고, 수준도 높아져 갈 것이어서 그만큼 ‘체계화’된 과학기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꾸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매스컴의 활성화 경향은 이들의 發言 공간을 제공하여 지금까지 과학기술자들이 갖고 있던 ‘中人意識’을 집어 던지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다섯째로는 근대과학의 西洋性에 대한 반발, 특히 그것이 갖고 있는 기계론, 환원론적 근거를 맹렬하게 비판하며, 오늘 인류가 갖게 된 문명의 병폐를 바로 여기에서 구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운동을 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형태는

이 글은 지난 1월30일 한국과학기술 진흥재단이 주최한 「첨단기술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표된 것임.

<편집자註>

東洋的 전통으로부터 서양 근대 과학기술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智慧를 찾겠다는 운동으로 가속되리라 생각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소위 '新科學운동'이 여기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장희익교수가 말하는 '메타 과학'의 방향도 또 다른 방향에서의 이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예견되는 앞으로의 反과학기술 운동 내지는 태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우리"가 누구인가를 새삼 정의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미 배부된 案에 의하면, "최근 우리 국민들은 특히 단기술의 효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副作用 측면만을 자기 중심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대표적 경우로 지난 11월의 안면도 <핵폐기물 처분장 시설> 반대운동과 1989년 8월의 군산 <동양화학 TDI공장> 반대운동을 들고 있다.

지역 사회의 사람들이 그들의 "자기 중심적" 판단에 따라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할 일은 바로 그런 분파적 이익 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여 정책 목표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첫째 우리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 태도만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국민" 못지 않게 자기중심적이었음을 반성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반대하는 일은 전혀 이해 부족에서 오는 자기 중심적 사고만으로 몰아 부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사는 근처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세운다면 우선 직감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닐까? "우리 국민"이 과학기술의 副作用 측면에 지나치게 민감한 채, 그들의 부족한 지식때문에 과학기술정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기술을 지나치게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만 麾下해 온 과정에서 스스로 얻은 업보라 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말로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쳐지면서도, 과학기술을 "우리 국민"에게 "바르

게" 이해시키는 노력은 거의 못해왔고, 과학기술 행정 또한 수출을 위해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등등의 경제발전의 보조적 위치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과학기술이란 한 사회의 문화적 틀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하기 마련이고, 그것이 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그 경제적 응용의 분야도 스스로 넓어질 수 있는 일이다. 물론 후발 개도국의 경우 우선 긴급한 분야를 선택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 과학기술 행정이 그 정도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면, 反과학적 경향이 심해지기 전에 우리는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이제 머지않아 과학기술은 이 땅의 불평등을 조장해 주는 '흉악범'으로 몰리기 시작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 뜻에서는 정부 조정부에서 科學技術處를 經濟企劃院과 같은 격이나 그 바로 위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이미 計劃案에도 있는 것처럼 科學技術文化院(가칭) 같은 출연 연구기관을 만들고 바로 이런 문제들을 연구해야 한다. 그런 기관은 과학기술의 대중화에 직접 관여하는 일도 할 수 있겠지만, 한국 사회와 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는 어차피 생산될 수 밖에 없는 '핵폐기물'을 일찍부터 보다 다른 중립적인 용어로 만들려는 노력도 해볼지 했을지도 모른다. '폐기물'이라면 누가 보아도 쓰레기를 먼저 연상하게 만든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우리 과학기술계가 한 번이라도 과학기술 用語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기회가 있었던가? 하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그것을 어떤 표현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주는 인상은 물론 교육적 효과도 크게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은 분명하다.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맞는 과학기술 정책이 세워지고, 과학기술의 교육도 바로 잡아 갈 때, 우리 한 국민은 서양에서 시작된 현대과학기술에 보다 빨리 적응하고, 이를 뛰어 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